

지정학과 지역주의의 공존?: 한국, 러시아, 유럽의 유라시아 공동체 담론 비교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기조는 크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한반도-러시아-유럽까지 잇는 신(新)단일경제권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탈(脫)지역 전략이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리적 광역성뿐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안보 이슈를 넘어서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심 지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유라시아’의 지리적 범주의 역내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러시아, 유럽연합 등이 각자 이해하고 있는 관념의 이해 방식-전통적 접근, 사상적 접근, 그리고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실체에 대한 이해와 미래를 토론한다. 결론에서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유라시아 담론을 접목하여 이해할 때만이 성공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세미나(2015.03.19) 발표자료

목 차

1. 서론
 - 가. 문제 제기
 - 나. 이 글의 목표와 구성
2. 유라시아(Eurasia)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가. 유라시아의 성격
 - 나. 러시아, 구라파(歐羅巴)에 대한 관념
 - 다. 현대적 의미의 유라시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 러시아와 유럽의 유라시아
 - 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 나. 유라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유럽의 입장
4. 결론 및 토론

1. 서론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대외정책의 기조는 크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통한 양자 간 관계 개선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환경·재난·원자력 안전 등 연성 이슈를 기반으로 다자간 대화 기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국가들 간의 평화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한반도-러시아-유럽까지 잇는 신(新)단일경제권 구상이 핵심임

가. 문제 제기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다른 외교정책 기조와 구분되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음
 - ① 대상 지역의 광역화(廣域化):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양자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앞선 두 정책 기조의 지역 범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포함하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음
 - ② 전통적 의미의 탈안보 이슈: 앞선 두 전략이 연성 이슈를 중심으로 하되 외교안보 영역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무역과 복합 물류 네트워크 확보 등 성장과 변형을 위한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③ 관심 대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 필요: 비록 경제 중심의 접근이더라도 대상 지역의 광역화는 이해의 범위를 정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철학 등 다방면으로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져 줌. 이는 남북 관계를 국제 체제와 동족 간 특수 관계의 병행으로, 동북아 관계를 동아시아 전통에 기반한 공유된 문화와 지역 갈등의 복합적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동북아 북방 문화와 슬라브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 그리고 동서유럽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투영해야 하는 생활방식과 다문화주의를 내면에 깔고 접근해야 함을 의미
- 유라시아가 포괄하고 있는 각 지역의 정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

됨. 그러나 현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내면에는 광역화된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 설정과 사회적·문화적 이해가 경제 논리에 가려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임

나. 이 글의 목표와 구성

- 이 글이 지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리적 광역성을 띠고 있는 만큼, 대상 지역을 크게 우리나라, 유럽, 러시아로 구분하여 각 실체들이 이해하고 있는 ‘유라시아’의 개념을 파악해야 함. 우리에게 유라시아는 넓게는 ‘유럽+아시아(Europe+Asia)’ 좁게는 ‘유럽+러시아(Europe+Russia)’의 조합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유럽이나 러시아 또는 기타의 국가들 역시 이 같은 언어 조합에 동의하고 있는지는 의문임.¹⁾ 둘째,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도 ‘유라시아’를 기반으로 한 광역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유럽과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유라시아’ 개념에 기반을 둔 사업과 담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검토함. 특히 러시아의 경우, 유라시아 지역의 중심으로서, 소위 ‘유라시아주의’를 대외정책의 중요한 개념으로 체화하고 있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지역적 의미에서 광역화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그 범위가 포용하고 있는 문화적, 정신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은 선결문제로서 매우 중요.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본래 의도대로 연성 이슈를 통한 전통적 안보를 확보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줄여줄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고려해야 함
-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두 번째 절에서는 ‘유라시아’의 개념 및 우리 정부가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검토함. 세 번째 절에서는 러시아와 유럽의 ‘유라시아’ 개념과 이들이 추구하는 ‘유라시아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 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유라시아의 복합네트워크 등 각 지역의 유라시아 개념 및 사업 구상이 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줄여줄 수 있는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토론하도록 함. 또한 유럽, 러시아의 유라시아 관련 구상과 담론이 우리가 지향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갖는 접합점은 무엇인지 토론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의 조화를 모색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것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동북아
북방 문화와 슬라브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
그리고 동서유럽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투영해야 하는
생활방식과
다문화주의를 내면에
깔고 접근해야함.
유럽, 러시아의
유라시아 관련 구상과
담론이 우리가
지향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갖는
접합점은 무엇인지
토론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의 조화를
모색할 방법이
무엇인지...*

*‘유라시아 공동체’
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 같은 지정학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탈근대적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지정학적 갈등 간
대처 방안과 조화에
대한 토론이 필요*

2. 유라시아(Eurasia)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가. 유라시아의 성격

- 인구 49억 명, 면적 5천 3백만 제곱킬로미터, 관련국가 90여 개에 달하는 유라시아 지역은 근대국가 형성기에 각종 전쟁과 갈등의 온상이었음. 대륙의 동서로 넓게 퍼져 있는 러시아는 전체 유라시아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1천 7백만 제곱킬로미터)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 무수한 전쟁을 치렀으며,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18~19세기), 러시아-중국 간 분쟁(1689), 러시아-일본 전쟁(1904~1905), 러시아-구 소련 국가들과의 전쟁(2008, 2014) 등을 통해 세계 전쟁사의 주요 축을 이룸
- 유라시아 지역은 여전히 국경 분쟁과 민족 갈등으로 긴장감이 높음. 반면, ‘유라시아 공동체’ 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 같은 지정학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탈근대적 구상으로 이해됨. 또한 이 지역은 미국-유럽 중심의 대서양주의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정치,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인 러시아가 가진 특수한 사회적 전통은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국가들과는 정신적 토대가 다르므로, 정치·경제적 긴장은 물론이고 문화적 갈등이나 세계관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지정학적 갈등 간 대처 방안과 조화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국가 역량의 탈지역화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시에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 이해와 전략 범위의 거시화(巨視化)가 요구됨
- 지정학(geopolitics)을 “영토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과 그것에 대한 합리화의 수단 이상”²⁾이라고 본다면, 광대한 영토를 분할하고 향유하는 국제관계를 낙관적 협력의 관계로 지향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고전적 지정학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 즉, 육로 간 연결망은 갈등과 긴장의 도화선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의 길임을 천명하는 것임. 하나의 대륙을 물류 관념으로 이룰 수 있는 현대 과학기술-특히 운송 및 통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함

나. 러시아, 구라파(歐羅巴)에 대한 관념

- 지리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구분은 우랄 산맥, 카스피 해, 카프카즈 산맥,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알려져 있음.³⁾ 그러나 과학 문명 이전의 사

고 체계에서 유럽, 아시아, 러시아, 유라시아의 구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어로 ‘구아대륙(歐亞大陸)’으로 표기하는 ‘유라시아’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제국(諸國) 및 러시아가 국제질서의 중요 축으로 소개되고 한참 후의 일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유럽을 한자어로 ‘구라파(歐羅巴)’라고 표기하고 있었기에 구라파에 대한 인상이 곧 유럽/러시아를 반영하는 인상으로 추측될 수 있음. 조선 중기의 유학자 이수광은 1614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구라파국(歐羅巴國)’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구라파국을 대서국(大西國)이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이마두(利瑪竇)라는 자가 있어서 8년 동안이나 바다에 떠서 8만 리의 풍량을 넘어 동월(東粵)에 와서 십여 년이나 살았다... 중국 서울에서 돌아온 이광정, 권희가 구라파국의 여지도 1건 6폭을 본관에 보내왔다... 지도는 두 나라의 사신인 풍보보(馮寶寶)가 만든 것으로서 그 말미에 서문을 지어 기록하였는데, 그 문자의 바르고 숙련됨이 우리나라의 문자와 다름이 없었다. 비로소 글과 문자가 같은 것을 믿었으며, 소중히 여길만한 것이었다... 구라파의 땅의 경계는 남쪽은 지중해(地中海)에 이르고, 북은 빙해(氷海)에 이르며, 동쪽은 대내하(大乃河)에 이르고 서쪽은 대서양(大西洋)에 이른다. 지중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천지(天地)의 한가운데라고 하여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라고 한다...”²⁴⁾

- 지봉유설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라파는 다른 말로 ‘대서국’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온 ‘이마두’는 천주실의를 저술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를 가리킴. 따라서 이수광이 언급하고 있는 구라파는 마테오 리치의 조국인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보거나 아니면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으로 보아야 함. 그러나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구라파의 경계 부분을 보면 이러한 추정은 달라짐. 지봉유설에서는 구라파의 경계를 서쪽은 대서양, 북쪽은 빙해, 남쪽은 지중해, 동쪽은 대내하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탈리아의 경계와는 크게 다름. 다만, 북·서·남의 위치는 현재 유럽의 경계와 거의 일치함
- 문제가 되는 것은 동쪽 경계인 ‘대내하’가 어디까지인가인데, 대내하의 경계에 따라 구라파를 지칭하는 영역의 경계가 유럽만을 말하는 것인지, 유럽과 러시아를 함께 아우르는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임. 1842년 위원(魏源)이 편찬한 ‘해국도지(海國圖志)’에 따르면 대내하와 아피하(阿被河)를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경계로 보고 있으며, 이때 대내하는 볼가(Volga)강 서쪽에 있는 ‘돈(Don)’강으로 비정됨⁵⁾

‘구라파’에 대한 인상이 곧

유럽/러시아를 반영.

구라파의 땅의 경계는

남쪽은 지중해에

이르고, 북은 빙해에

이르며, 동쪽은

대내하에 이르고

서쪽은 대서양에

이른다

**지봉유설을 통해 본
조선 중엽의 구라파
세계는 영역으로는
현재의 유럽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 명나라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선교사 줄리오 알레니(Julio Aleni)가 1623년에 편찬한 ‘직방외기(織方外紀)’의 만국전도(萬國全圖)를 토대로 편찬된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에서는 지금의 발칸 반도(몰도바 또는 루마니아) 북쪽에 대내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럴 경우 대내하는 대략 ‘드네스트르(Dnestr)’ 강으로 비정(比定)될 수 있음.⁶⁾ 드네스트르 강을 대내하로 볼 경우 지금의 동유럽을 경계로 구라파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구라파 관념에 지금의 러시아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대내하가 돈 강으로 비정될 경우에는 당시 구라파의 영역은 지금의 러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직방외기가 편찬될 당시의 러시아가 유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음⁷⁾
- 17세기 초반의 러시아는, ‘차르 러시아국(Tsardom of Russia)’으로서 동방으로 국경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직전의 영토를 영유하고 있었음. 17세기를 거치면서 러시아의 영토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시베리아 등으로 확대되었고, 아무르 강에 이르고 난 후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중국(청)과 국경에 관한 화친을 맺었음. 따라서 17세기 초·중반의 러시아는 국가의 영역이 동쪽으로 완전히 확장되지 않은 유럽 주변부의 국가였을 뿐임. 더 나아가, 지봉유설에는 구라파국 외에 서역의 국가로 佛狼機國(포르투갈), 永結利國(영국), 南番國(네덜란드)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의 러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는 보이지 않음. 종합하여 정리하면, 지봉유설을 통해 본 조선 중엽의 구라파 세계는 영역으로는 현재의 유럽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 러시아가 조선의 공식문서에 등장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1654년(효종 5년) 2월 2일 자 기사임. 당시 기사에는 러시아를 라선(羅禪)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서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중국(청)의 북쪽 또는 동쪽의 이민족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됨

“...청차(淸差) 한거원(韓巨源)이 서울에 들어왔다. 상이 편전에서 접견할 적에 대신들도 역시 입시하였는데, 거원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바쳤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조선에서 조창(鳥槍)을 잘 쓰는 사람 1백 명을 선발하여, 회령부(會寧府)를 경유하여 양방장(昂邦章)의 통솔을 받아 가서 나선(羅禪)을 정벌하되, 3월 초 10일에 영고탑(寧古塔)에 도착하시오.’하였다. 거원이 자리를 피하여 절을 하자, 상이 위유하고 이어 차를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나선은 어떤 나라이오?” 하니, 거원이 아뢰기를, “영고탑 옆에 별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선입니다.”...⁸⁾

- 국왕이 나선에 대해 역관 한거원에게 묻자, 한거원은 나선을 영고탑(寧古塔)

옆의 별종이라 폄하하였는데, 영고탑은 길림성의 건주 여진이 발원한 곳으로 청나라가 발원한 곳임. 이를 다시 풀이해 보면, 영고탑이 지금의 헤이룽장 성에 있으므로 나선이 이곳의 옆에 있는 별종으로 지칭하는 것은 방향성으로 보았을 때 분명 서역 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나선에 대한 이런 시각은 속종 조에 가면 크게 바뀌게 되는데, 청국에 사신으로 갔던 남구만이 조선에 돌아오면서 속종에게 올린 글의 마지막 문단에 적힌 글의 일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음

“...아라사(鵝羅斯)는 북해(北海)와 접하고 있는 대국인데, 대비(大鼻)와 가까운 지역으로서 대비가 두려워하여 복종하는 나라입니다. 예부 시랑(禮部侍郎)이 접반(接伴)하고 병부 시랑이 영을 나가 북해까지 나아가 하륙(下陸)하고 몽고(蒙古)의 오왕(五王)들이 말을 번갈아 타면서 들여보내는데, 그러한 점으로 보아 아마도 강대국인 듯 하오며, 이렇게 접대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대비(大鼻)와의 승부(勝負) 관계가 달린 것 같습니다...”⁹⁾

- 여기서는 효종 조의 기사와는 달리 러시아를 아라사(鵝羅斯)라고 칭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고, 그 위상을 ‘나선’을 지칭할 때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음. 다만, 이 시기까지 조선에서 러시아는 서역의 다른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그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조선 시대 효종-숙종 조의 관념에서 첫째, 러시아는 여전히 구라파 제국의 일원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둘째, 조선과 대결 국면을 가져야 할 상대이거나, 또는 막연하나마 강대국의 위상을 가진 대국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도였음. 이는 러시아에 대한 관념이 교역과 협력이 아닌 갈등의 대상이었음을 의미함

다. 현대적 의미의 유라시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유럽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 ‘유라시아’라고 지칭하게 된 단초는 몽골 제국의 대륙 제패를 언급하면서 연상된 것으로 추정됨. 유목민이 거류하는 대륙의 초원이 상징하는 것은 칭키스칸이 제국을 건설한 몽골이었음. 즉,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지배한 몽골의 이미지는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의 대륙임을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었음¹⁰⁾
-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는 유라시아의 범위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구소련 국가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함. 구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등이 언급되며,

*러시아는 여전히
구라파 제국의
일원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조선과
대결 국면을 가져야 할
상대이거나, 또는
막연하나마 강대국의
위상을 가진 대국으로
파악. 러시아에 대한
관념이 교역과 협력이
아닌 갈등의
대상이었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안은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물류-에너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장기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71%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자는
구상”**

- 지역으로는 시베리아를 아우르고 있음¹⁾
- 국내 유라시아 연구가, 사전적 의미의 유라시아-유럽과 아시아를 횡단하는 대륙 전체-가 아닌, 러시아(구소련)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러시아 지역 전공자들(정치학, 사회학, 문학 포함)이 소위 또 다른 의미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유라시아의 타 지역, 타국가가 아닌 러시아(구소련 포함)에 집중하여 연구하는 이런 경향은 일차적으로는 러시아가 가진 힘의 우위에 근거하고 있음. 또한 지식사회의 ‘러시아’ 편향성으로 인해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지역을 러시아 및 러시아 주변 권역으로 한정하게 만들²⁾
- 이 같은 여건 속에서, 2013년 10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등 세 가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안은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물류-에너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장기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71%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자는 구상”임
- 이 같은 구상은 말 그대로 교역의 인프라가 되는 물류 인프라와 러시아의 큰 원천인 에너지를 매개로 하는 경제공동체에 방향성을 두고 있음³⁾



출처: 동아일보(dongA.com), 2013년 10월 19일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발표된 이후 불과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천 방안이 조금씩 제시되고 있음. 이들의 관심 역시 물류와 운송 및 에너지로 집약되고 있으며, 미약하지만 지역적 관심도 기존의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담론에서 북한과 중앙아시아, 몽골 등으로 지역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음⁴⁾
- 논의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서 언급되었듯이 물류와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된 가운데 물류 수송을 위한 운송 수단의 건설 필요성 또한 언급됨.¹⁵⁾ 이런 가운데, 그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온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남북이 함께 개발하는 ‘소지역’ 모델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한 가지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¹⁶⁾

-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준비 기간이 가장 길었던 만큼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당초 구상과 접합 가능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사안임

3. 러시아와 유럽의 유라시아

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 유럽-아시아의 중심은 러시아로 유라시아 관념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것은 바로 러시아임. 따라서 ‘유라시아’ 관념과 역사는 그 어느 곳보다 러시아에서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1920년대로 알려져 있음¹⁷⁾
- 러시아 지리학자인 사비츠키(П. Савицкий)는 유라시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친 거대한 땅덩어리의 서쪽에 위치한 국가와도 구별되고, 남쪽과 남동쪽에 위치한 국가와도 구별되는 하나의 세계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두 대륙으로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독립된 지리적 정체를 이룬다.…”¹⁸⁾

-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체로서 러시아는 지리적인 접근뿐 아니라 역사적, 지정학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유라시아주의자들이 활동해 왔음. 역사학자 베르나드스키(Г. Вернадский)는 1932년 “유라시아주의: 선언, 공식화, 테제”에서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유라시아 세계의 문화적 독특성을 확신하는 정치적, 이념적, 정신적 운동”이라고 정의함.¹⁹⁾ 이들처럼 초기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었으나 동시에 유럽 중심의 이데올로기-가톨릭, 유럽문명의 우월성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음. 따라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아시아의 동양적 전통과 유럽의 서구적 전통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특성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발견한 독자적인 노선 즉, 제3의 길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였음.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유라시아’라는 러시아 중심의 러시아식 지정학의

따라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아시아의 동양적
전통과 유럽의 서구적
전통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특성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발견한 독자적인 노선
즉, 제3의 길에 대한
확신을 추구*

알렉산드르 두긴은**대서양주의나****미국중심주의가****추구하는 단극****세계화주의에****반대하고 전 세계 인류****모두가 민족, 공간,****국적에 상관없이****참여할 수 있는****‘다극체제’ 또는****‘대안적 세계화’를****주장**

탄생으로 대변되었음²⁰⁾

-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또한 20세기 후반 이후 유럽-미국 간 ‘대서양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드러나기도 함. 반서구적 태도의 산물로서 유라시아주의는 종종 같은 반서구주의적 문화인 이슬람과도 연계성을 가지며, 심지어 현실에서는 극우적 색채를 띠 때도 있음.
-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두긴(Александр Дугин)의 ‘신유라시아주의’는 최근 러시아의 유라시아 관념을 잘 보여줌.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는 대서양주의나 미국중심주의가 추구하는 단극 세계화주의에 반대하고 전 세계 인류 모두가 민족, 공간, 국적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극체제’ 또는 ‘대안적 세계화’를 주장²¹⁾
- 러시아가 유라시아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다민족 사회이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있기에 가능하며, 이러한 태도는 때때로 앵글로 색슨의 대서양주의에 앞선다고 주장함. 대서양주의 중심의 물질적 세계화는 어느새 단극주의로 이끌렸으며, 이에 대응하는 반세계화의 정서가 곧 유라시아주의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음. 실제로 서구는 과거에는 식민지 폭력을 자행하였고, 현재는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탐욕에 빠진 선도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며 이 같은 세계화는 유라시아의 대안 세계가 배격해야 할 대상임
- 두긴은 지리적으로 세계질서의 공간을 유럽-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미국, 유라시아 네 지역으로 구분하며, 러시아-아시아 간의 통합 과정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가 유라시아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음.²²⁾ 초기의 유라시아주의가 유럽-아시아로부터의 구분 또는 정체성의 확보에 있었다면, 신유라시아주의는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의 역량을 회복하고 반서구적인 정서의 공고화에 보다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이처럼 러시아의 정체성, 사상성, 발전 방향 등을 담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는 그들의 대외정책에서 강력한 사상적 뒷받침이 되고 있음²³⁾
-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애국주의는 물론,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 국가들에게서도 인기를 끌고 있음. 두긴이 주도한 ‘유라시아 운동(Евразийское Движение)’은 러시아 정치 구도에서 푸틴에 대한 지지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 최근 러시아의 유라시아 운동은 일시적으로 러시아 내부에서 지지 세력이 한풀 꺾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제 사회의 변혁을 피하는 움직임으로 거듭나고 있음²⁴⁾

나. 유라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유럽의 입장

- 앞서 살핀 대로 러시아에게 ‘유라시아’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투영하

는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담고 있음. 이 때 러시아의 유라시아 개념은 유럽을 극복의 대상으로 대상화시키기 위한 정치운동의 한 방식이기도 함. 따라서 유럽은 유라시아를 유럽과 러시아가 공존하는 갈림길이라는 모호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미국의 켄트 콜더(Kent Calder)는 ‘유라시아 지정학’을 러시아 중심의 지역경제통합운동으로 보면서 일종의 ‘신대륙주의(New Continentalism)’라고 규정.²⁵⁾ 유라시아는 동북아를 포괄하면서 에너지 등 보다 다방면에서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대륙 내 국가들 간의 결속을 높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그의 주장임
 - 이러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유라시아의 내적 공고화를 경계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가진 함의를 전략적으로 도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바라보는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경계와 의혹의 눈길이 가시지 않고 있음. 특히 2013년 말 이후 여전히 해결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의 외연적 표현으로 우려되고 있기도 함
 - 실천의 영역에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은 2015년 7월 현재, ‘유라시아’를 ‘지역(Region)’ 범주의 정책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음.²⁶⁾ 이것은 유럽연합이 유라시아를 아직 지역단위의 정치공동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
-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은 2025년 미래를 기준으로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통합 가능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음. 즉 구소련 국가들은 네 개의 단위지역—EU와 국경을 맞대는 동유럽, 남코카서스, 흑해연안, 중앙아시아—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음²⁷⁾
- 이러한 분화는 각 유라시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경제질서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예컨대, 보다 민주화 되고 자본주의화 된 유럽연합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남코카서스 국가들과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유지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이들을 유라시아라는 지리적 잣대로 묶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2025년을 불과 10년 앞둔 지금의 유라시아는 적어도 유럽연합의 예측과는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유럽연합과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며 양자 간 경제적 교류의 토대는 확대, 심화되었으나 이것은 오히려 유럽에게 짐이 되고 있음
- 협력협정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부패와 무능으로 러시아에게 유린당하면서 유럽연합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가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2015년 7월 현재,
‘유라시아’를
‘지역’ 범주의 정책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음.
유럽연합은
2025년 미래를
기준으로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통합 가능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

유럽연합은 여전히**푸틴이 그리는****‘상상 속의****유라시아’와****경제공동체로****드러나는****‘실제의 유라시아’****사이에 큰 괴리가****있다고 보고 있음.****러시아보다 오히려****중국과 더 깊은****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중앙아시아의****국가들은****경제공동체로서의****득보다는****경제고립으로 받는****압박이 더 클 것이라는****관측이 있음**

합류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기에 이르렀음

- 러시아는 2015년 1월부터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 Economic Union: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5월])’를 출범시키면서 유럽연합이 양 지역 간 교역과 관련된 대화의 창구에 나서도록 촉구함²⁸⁾

- 실제로 유럽연합의 근린정책(ENP)에서 ‘동유럽 동반자 관계(Eastern Partnership)’ 프로그램에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일원인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와의 대화가 유럽연합에게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음

-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규모가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미화 2조 4천억 달러에 이르며 베트남과는 FTA를 마무리짓고, 터키와 인도, ASEAN, MERCOSUR 등과는 FTA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²⁹⁾ 따라서, 이 같은 상대에 대해 유럽연합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무역협정을 맺으려던 아르메니아조차 협정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유라시아에 대한 유럽의 고민은 훨씬 깊어지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유럽연합의 ‘안보연구소(IS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가 2014년에 내놓은 유라시아 공동체 관련 보고서는 냉정한 현실 진단을 촉구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여전히 푸틴이 그리는 ‘상상 속의 유라시아’와 경제공동체로 드러나는 ‘실제의 유라시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음.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공동체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러시아를 통해 그들 나름의 안보적,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일 뿐 ‘진정한 유라시아 주의자(enthusiastic Eurasians)’는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임. 예컨대,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의 분쟁에서 러시아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자신의 노동집약 산업에 대해 경제공동체가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경우에 한해 가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³⁰⁾

- 역외 국가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는 결국 기초가 약한 일부 회원국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러시아가 상당 부분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봄. 폐쇄화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줄지도 의문임. 러시아보다 오히려 중국과 더 깊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경제공동체로서의 득보다는 경제고립으로 받는 압박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³¹⁾

4. 결론 및 토론

- ‘유라시아’ 개념은 매우 모호하면서도, 때로는 전략적인 개념임. 그 이유는 유라시아가 지리적 개념일 뿐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철학적, 정치적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임
- 유럽연합은 유라시아를 경제적 잣대로 그리는 것은 상상(imagine)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를 비롯하여 실무 영역에서도 유라시아의 원류와 개념을 지리적 개념, 또는 산업 개념의 플랫폼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음. 유럽연합 역시 ‘유라시아’ 개념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의미를 공유할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음. 무역과 경제 교류도 유럽연합이 마련해 놓은 틀—예컨대 협력협정—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음
- 러시아 중심의 ‘(신)유라시아주의’가 서구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진실이라면, 유럽으로서 는 차라리 이를 경계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태임
-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라시아’의 전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첫째, ‘유라시아 공동체’, ‘(신)유라시아주의’ 등은 러시아가 서구에 대항하며 100년 동안 쌓은 역사적·철학적 담론의 성격이 강하므로, 동아시아의 끝에 있는 우리가 전략적 타이틀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려 한다면,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성찰을 통해 공유할 가치를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함
- 둘째, 우리 정부가 내놓은 물류-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실천이 어떤 가치 분화 속에서 탄생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유라시아 중심 세력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핀 대로 푸틴이 수용하고 있는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는 영미 중심의 물질적 세계화와 탐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 셋째, 다른 한편으로 유럽은 ‘(신)유라시아주의’ 또는 ‘유라시아 공동체’ 관념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럽은 유라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익이 푸틴이 상상하는 공동체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라시아 공동체는 푸틴이 꿈꾸고 있는 진정한 (신)유라시아주의에 기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설령, 향후 (신)유라시아주의에 기반을 둔 유라시아 공동체가 등장한다고 해도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는 경계해야 할 전략의 대상일 뿐임
- 넷째, 우리보다 먼저 유라시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10년 뒤를 예측하는 유라시아 전략은 근린정책, 흑해, 중앙아시아

**유럽연합은
유라시아를 경제적
잣대로 그리는 것은
상상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고 있음.
설령, 향후
(신)유라시아주의에
기반을 둔 유라시아
공동체가 등장한다고
해도 유럽의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할 전략의 대상일 뿐임**

등으로 파편화된 국가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유럽을 비롯한 서구가 유라시아의 부활이 신대륙주의화 된 지역주의의 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임

주석

- 1) 넓은 의미에서 유라시아 지역은 중국, 인도, 중동지역, 동남아시아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예정하고 있는 러시아,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 2) 콜린 플린트,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도서출판 길, 2009), p.41.
- 3) 신범식,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변동과 탈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6), pp.15-16.
- 4) 이수광 저, 남만성 역, 『芝峯類說(上), 諸國部』(을유문화사, 1994), pp.90-91.
- 5) 『海國圖志』, 卷七十四 “...《職方外紀 之阿細亞與歐羅巴二圖, 一則界以大乃河, 一則界以阿被河. 此二河者一在裏海之西, 一在蔥嶺之東, 相去二十餘度, 計五千餘裏. 循前圖大乃河則西侵歐羅巴之界...”, 卷七十六. “...大乃河, 長二千四百八十裏, 分三岔入墨阿的湖, 注地中海》...”
- 6) 줄리오 알레니 지음, 천기철 옮김, 『직방외기』 중 ‘천하도지도’(일조각, 2005).
- 7) 『직방외기』에 따르면 직방외기 권 2 ‘구라파’부분에 모스크바 대공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당시의 모스크바 대공국의 영토는 지금의 러시아와는 크게 다르므로 지리적 재구성에 혼란이 있다.
- 8)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장 A면, 효종실록 실록 5년(1654, 청 순치제 11년) 2월 2일(계해일)자 1번째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국역본.
- 9) 조선왕조실록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 강희제 25년) 10월 13일 1번째 기사.
- 10) 몽골 유목민의 역사를 중앙유라시아와 연관시킨 책으로는, 궁협순자, 조병학 공저, 『최후의 몽골제국』(백산출판사, 2000) 참조.
- 11) 김영진, “유라시아 국가의 권위주의와 경제발전,” 『국제지역연구』, vol.14, no.2 (2010), pp.55-90; 고상두 외,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한울, 2012); 김여진·윤인하, “유라시아의 지역통합,” 『동유럽발칸연구』, vol.38, no.5(2014), pp.201-230; 우준모·김중현, “유라시아 지역통합체 건설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전략적 선택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vol.18, no.5(2015), pp.59-78; 이길주, “러시아, 한국 문학작품에 나타난 유라시아-시베리아 이미지,” 『학술심포지엄』(배재대 한국-시베리아 센터, 2005), pp.201-204 등 참조.
- 12) 예컨대, 비 러시아어권이지만 유라시아 개념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는 몽골,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 13) 박 대통령, “유라시아 단일시장을 만들자,” 동아일보(dongA.com), 2013년 10월 19일.
- 14) 이성규·윤익중,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의 신동방 정책: 권역별 에너지

- 협력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vol.26, no.3(2014), pp.159-184; 김상현, “지식공유 기반의 유라시아 문화 네트워크 포털 구축을 위한 제언: 중앙아시아 연구 인프라와 지식체계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vol.30, no.3(2014), pp.47-87; 성원용,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월간교통』, vol.1(2014), pp.6-13; 이상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원심력과 구심력: 에너지,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vol.24, no.2(2014), pp.247-269; 이재훈,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 철도망 구축과 정책과제,” 『한몽경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4), pp.3-26.
- 15) 이런 내용은 대통령, 외교부장관 등의 국제회의 연설에서도 되풀이 하여 등장한다.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기조연설(2014년 12월 8일); “제10차 ASEM 정상회의,” 제2세션 박근혜 대통령 발언문(2014년 10월 17일); “다보스포럼 계기 한국의 밤 행사,” 윤병세 외교부장관 연설문(2015년 1월 22일).
 - 16) 신범식,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JPI정책포럼』, vol.8(2014), pp.1-26.
 - 17) 유라시아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1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출판된 논문집, 『동방으로의 출구, 예감과 완성, 유라시아주의의 주장』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권정임, “러시아 유라시아주의,” 『노어노문학』, vol.17, no.1(2005), pp.165-194 참조.
 - 18) 배규성, “러시아 대외정책의 새로운 사상적 기초로서 신유라시아 주의,” 『국제정치연구』, vol.6, no.1(2003), p.88에서 재인용.
 - 19) 박혜경, 신유라시아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노어노문학』, vol.26, no.4(2014), p.378.
 - 20) 배규성(2003), pp.90-96.
 - 21) 박혜경(2014), p.382.
 - 22) 박혜경(2014), p.386.
 - 23) 배규성(2003), p.110.
 - 24) 박혜경(2014), p.389.
 - 25) 켄트 콜더, 오인석 외 역, 『신대륙주의』(아산정책연구원, 2013).
 - 26) EU가 ‘지역’ 범주의 차원에서 다루는 정책 대상은 유라시아 지역 관련해서는 흑해, 중앙아시아, 북극, 지중해, 유럽경제지대(EEA), 근린(ENP), 북유럽 등이며, ‘유라시아’를 고유의 단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27) Nicole Gnesotto and Giovanni Grevi, *The New Global Puzzle: What World for the EU in 2025?* (ISS, 2006), p.103.
 - 28) Euboserver, “Russia calls for EU talks with newly born Eurasian Union,” 2015.01.02(<https://euobserver.com/economic/127081>).
 - 29) Eurasian Economic Union: Ambassador Vladimir Chizhov’s interview with Euobserver(<http://www.russianmission.eu/en/news/eurasian-economic-union-ambassador-vladimir-chizhovs-interview-euobserver>).
 - 30) Nicu Popescu, *Eurasian Union: the real, the imaginary and the likely*, Chaillot Paper 132, September 2014, p.22.
 - 31) Nicu Popescu(2014). p.25.

참고문헌

- 고상두 외.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파주: 한울, 2012.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권정임. “러시아 유라시아주의.” 『노어노문학』, vol.17, no.1(2005). pp.165-194.
- 김상현. “지식공유 기반의 유라시아 문화 네트워크 포탈 구축을 위한 제언: 중앙아시아 연구 인프라와 지식체계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vol.30, no.3(2014). pp.47-87.
- 김영진. “유라시아 국가의 권위주의와 경제발전.” 『국제지역연구』, vol.14, no.2(2010). pp.55-90.
- 김여진 · 윤인하. “유라시아의 지역통합.” 『동유럽발칸연구』, vol.38, no.5(2014). pp.201-230.
- 박혜경. “신유라시아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노어노문학』, vol.26, no.4(2014). pp.377-401.
- 배규성. “러시아 대외정책의 새로운 사상적 기초로서 신유라시아 주의.” 『국제정치연구』, vol.6, no.1(2003). pp.85-115.
- 성원용.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월간교통』. vol.1(2014), pp.6-13.
- 신범식.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변동과 탈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6.
- _____.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JPI정책포럼』, vol.139(2014). pp.1-26.
- 우준모 · 김종현. “유라시아 지역통합체 건설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전략적 선택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vol.18, no.5(2015). pp.59-78.
- “유라시아 단일시장을 만들자.” 동아일보(dongA.com). 2013년 10월 19일.
- 윤병세 외교부장관 연설문. “다보스포럼 계기 한국의 밤 행사.” 2015년 1월 22일.
- 이길주. “러시아, 한국 문화작품에 나타난 유라시아-시베리아 이미지.” 『학술심포지엄』. 배재대 한국-시베리아 센터, 2005. pp.201-204.
- 이상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원심력과 구심력: 에너지,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vol.24, no.2(2014). pp.247-269.
- 이성규 · 윤익중.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의 신동방 정책: 권역별 에너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vol.26, no.3(2014). pp.159-184.
- 이수광 저, 남만성 역. 『芝峯類說』(上). 서울: 을유문화사, 1994.
- 이재훈.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 철도망 구축과 정책과제.” 『한몽경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 pp.3-26.
-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기조연설, 2014년 12월 8일.
- “제10차 ASEM 정상회의.” 제2세션 박근혜 대통령 발언문. 2014년 10월 17일.
- 줄리오 알레니 저, 천기철 역. 『직방외기』. 서울: 일조각, 2005.
- 켄트 콜더 저, 오인석 외 역. 『신대륙주의』.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3.
- 플린 플린트,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Euobserver. "Russia calls for EU talks with newly born Eurasian Union." 2015.01.02
(<https://euobserver.com/economic/127081>).

Eurasian Economic Union: Ambassador Vladimir Chizhovd's interview with
Euobserver(<http://www.russianmission.eu/en/news/eurasian-economic-union-ambassador-vladimir-chizhovs-interview-euobserver>).

Gnesotto, Nicole and Giovanni Grevi. *The New Global Puzzle: What World for the
EU in 2025?*, Paris: ISS, 2006.

Popescu, Nicu. *Eurasian Union: the real, the imaginary and the likely*. Chaillot
Paper.132, September 2014.

❖ 저자 약력

■ 도종윤

現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브뤼셀 자유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 학
위 취득. 연세대 연세-SERI EU 센터 Post-Doc,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성균
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강사 역임. 주요 논문으로 “환유를 통한 국제정치 텍스트의
해석(2014)”, “국제정치학에서 주제물음(2013)”,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전략(2013)”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